



이 황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법무대학원 원장
-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 혁신경제분과 분과장

로스쿨 제도 재설계해야

해마다 봄이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마다 긴장이 감돈다. 그 해 졸업생들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며 밤을 지새우고, 교수들은 학교별 결과를 보고 합격률 1%에 울고 웃는다. 전국 25개 로스쿨에 예외는 없다. 로스쿨 간에 합격률은 크게 차이가 나서, 학교 간 우열과 선호를 결정적으로 갈라준다고 보도된다. 금년도 전체평균 합격률은 52.4%, 초시 합격률은 별도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작년의 72.21%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여 이른바 ‘50-70 체제’가 정착되었다. 로스쿨 최우등성적을 받고 최고의 로펌, 재판연구원, 검찰 등에 진출한 학생이라도 변호사시험에 탈락하는 경우가 심심치않게 있는데, 그 순간 모든 영광이 無로 돌아간다. 변호사 시험에 빠끗하면 순식간에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공포에서 자유로운 학생은 단 한 명도 없다.

로스쿨 수업은 그래서 이른바 ‘변시적합성’에 초점을 맞추도록 요구된다. 획일적이고 단편적인 변호사시험을 비판하고 한 발 더 나아가는 순간, 변시부적합 교수라는 낙인이 찍히고 인터넷 학생게시판에 불만의 글이 넘치며 폐강의 위기에 처한다. 학교 간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듣기로는 대동소이하다. 로스쿨 교수의 실질적 경

쟁상대는 신림동 일타강사로, 경쟁법상 관련 시장 획정의 법리에 따르면 이미 사실상 수험용 강사나 다름없다. 일부에서는 학생들이 교수를 불신한다는 흥흥한 소문도 있다.

미국식 로스쿨제도 도입의 명분 중 하나는, 다양한 전공지식과 사회경험을 가진 학생들을 학교에서 충실하게 교육하여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것이었다. 필자는 미국 로스쿨의 정규 법학교육과정을 이수한 경험이 있는데, 애초부터 반신반의했다. 꼭 ‘하버드대학의 공부벌레들’이라는 1970년대 영화를 보고 하는 얘기 같았다. 반신(半信)은 다양한 전공지식과 사회경험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대한 기대였고, 반의(半疑)는 로스쿨에서 3년 동안 이론과 실무를 모두 가르쳐 우수한 법조인을 배출하겠다는 데 대한 회의였다. 미국 로스쿨은 우리처럼 법규범을 모두 가르치고 외우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우수한 로스쿨일수록 주로 ‘법조인으로 생각하는 법’(thinking like a lawyer)을 가르쳐 졸업 후 실무교육을 통해 물고기를 낚는 자질을 키우는데 주안점을 둔다. 변호사시험은 최소한의 법률지식과 소양을 평가한다. 시험의 평가기준은 법조인으로서 기초가 닦였는지 여부이고, 실무능력은 로스쿨이나 시험이 아니라 법원이나 로펌 등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키워진다. 변호사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로펌 등은 기꺼이 교육비용과 시간을 부담하여, 크게 보면 교육체계의 일부로 기능한다.

로스쿨이 출범한지 15년이 된 지금은 제도의 성패를 평가하는데 부족하지 않은 시점이

다. 결론적으로 필자의 半信은 背信받았다. 로스쿨 입학생들은 학부를 갓 졸업한 어린 경영·경제학 전공자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당초 기대했던 이공계 졸업생이나 전문적 직업 경험자들은 학점과 리트시험 성적에서 이들과 경쟁상대가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양한 정성요소를 입시에 반영하려는 시도는 입시 부정이라는 프레임과 정부감사 압박 속에 꺼내기도 어렵다. 반대로 半疑는 빠짐없이 현실이 되었다. 변호사 자격에 대한 수요가 큰 상황에서 로스쿨 입학정원과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낮게 유지할 때, 과도한 프리미엄이 붙고 모든 학생들이 시험합격에 목을 때는 상황에 변화가 없으리라는 예상 그대로이다. 과거 학부의 정규법학교육과 사법시험 공부, 거기에 사법연수원 과정까지 3년에 옥여넣다보니 공부할 분량이 과도해져 정상적으로 강의하는 게 불가능해졌다. 이제 법학공부는 체계적 교과서와 판결문을 토대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육법의 수험용 짜라시를 달달 외우고 채점기준표에 맞춰 키워드를 기계적으로 나열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되었다. 로스쿨 강의가 부실하다는 비판이 있는데, 일응 맞는 말이다. 등록금 많이 낸다고 큰소리치는 학생들 요구에 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학교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 아니라 학교의 학원화를 통한 법조인 생산이 암암리에 공식화되고 있다. 취업난 속에 그러한 학점만 추구한 결과를 보고 로펌은 변호사를 선발한다.

인공지능과 로봇 등 첨단과학이 주도하는 경제만능의 시대에, 우수한 인문사회 과학도들은 어쩔 수 없이 로스쿨로 몰리고 있다. 로

스쿨 도입으로 법조인 숫자가 급증했다고 하지만, 시험합격자는 과거에도 꾸준히 증가해 왔다. 변호사 급증이 로스쿨 제도 때문만은 아니라는 뜻이다. 과거 이른바 사시낭인은 오탈자로 이름만 바꾸어 사회에 대한 증오심을 키우고 있다. 이런 사정에서 로스쿨 입학정원과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고정시킨 현행 제도는 사실상 과거 사법시험과 다를 것이 없다.

현 정부는 사법개혁 공약의 일부로 야간 로스쿨, 특별전형, 장학금 확대 등을 제시했고, 최근 일부에서 로스쿨 정원확대까지 포함해 논의가 시작되는 듯 하다. 그러나 로스쿨 교육과 변호사시험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난 쟁점에 불과하다. 학교와 교수도 사정이 딱하기는 마찬가지다. 전국 로스쿨은 예외없이 대규모 적자에 시달려 그렇지 않아도 재정이 어려운 대학교에서 미운 오리새끼 신세가 되어버렸다. 교수들 상당수가 필자와 같이 로스쿨 도입 후후에 임용되어 노령화되고 최근 대거 정년을 맞기 시작했는데, 많은 사립대학들이 재정 문제로 신규임용을 못하고 있다. 지난 15년간 대학등록금과 함께 교수 월급도 반값이 되어, 교수 숫자가 빠르게 줄어드는데 우수한 법조인들은 교단에 서기를 꺼린다. 독립적 연구와 인재양성의 명분을 내세워 교육자를 모시는 시대는 케케묵은 옛 얘기다. 대륙과 영미식 제

도를 통합한 법학교육의 장밋빛 꿈에서 학교마다 로스쿨 인가용으로 건축된 법학도서관과 모의법정은 회색 먼지에 뒤덮인 지 오래다.

문제해결의 출발은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법조인 수요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다. 어떤 수준과 자질의 법조인을 얼마나 배출해야 하는지, 법학교육의 목표는 무엇인지,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어떤 교수와 교육과정 그리고 변호사시험이 필요할 것인지, 법조계의 역할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공론화와 교육체제 재설계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사법시험 부활도 일부에서 제기되지만, 되돌아가기에는 너무 먼 길을 와버렸다. 일본처럼 이원화시키는 것은 현재의 문제에 과거 사법시험의 폐해를 더하는데 불과하다. 변호사법은 법률사무를 변호사들만 취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국내외에서 이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변호사 업무의 상당부분을 하고있는 현실에서 본래 취지와 달리 새로운 시장개척의 장애물이 되지않을까 염려스럽다. 15년간 쌓인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의 모순과 문제를 로스쿨과 법조계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중지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이른바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은 법조인 양성체제에도 절실하다.